

'23.12.11(월) 8:00-9:00
서울-세종 간 영상회의
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
안전 ② (공개)

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

'23. 12. 11.

기획재정부

목 차

I. 공급망 기본법 추진현황	1
II. 후속조치 추진계획	3
1. 공급망위원회 구성	3
2. 경제안보품목 지정	3
3. 조기경보시스템 구축	4
4.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	4
5.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	4
III. 기대효과	5

I. 공급망 기본법 추진현황

1. 추진 경과

-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발의(류성걸 의원, '22.10.14), 국회 본회의 통과('23.12.8)

※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('24.6월) 시행

- 공급망 기본법 통과로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'23.6.25),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(법사위 계류) 등 공급망 3법 중 2개 법안 입법 완료

2. 주요 내용

- 컨트롤타워 신설 등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
 - 공급망안정화위원회* 설치를 통해 산업부 등 개별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범정부적 체계로 확대·강화
- * (소속) 기재부, (구성) 정부위원(위원장: 기재부장관)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25명
-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립
 - (위험예방) 경제안보품목 지정,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및 예산·세제·금융 등 지원근거 마련
 - (위험포착) 조기경보시스템(EWS) 운영, 현장조사 등
 - (위기대응)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, 위기 대책본부 설치 및 위기품목 지정, 긴급수급조정조치 등
- 기업지원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
 - 한국수출입은행 기금 대출, 보증을 통해 민간기업의 수입국가 다변화,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, 기술개발 지원, 비축 확대 등 지원

참고1

공급망 기본법 체계

비전

국가안전보장 및 경제안보 확보

목표

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 목표 달성

역할분담

부처 : 실제 안정화 조치

기재부 : 지원체계 제공

위험 예방 (안정화 지원)

▪ **[계획수립]**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세부 연도별 '시행계획' 수립

▪ 경제안보 관점의 '기본계획(3년)' 수립

▪ **[대상지정]** 경제안보품목 지정

▪ 필요시 부처에 지정 요청

▪ **[사업신청]**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계획을 신청

▪ **[사업지정]** 선도사업자 선정

▪ **[평시지원]** 실제 재정 등 지원

▪ 부처 재정사업 · 조세감면 수요 반영

▪ **[기금지원]** 사업자에게 실제 금융지원

▪ 공급망 기금 재원 및 지원체계 마련

위험 포착

▪ **[모니터링]**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

▪ 범정부 EWS 지침 마련

▪ 부처별 정보 분석결과 공유

▪ 위험징후시 관계부처 협의

위기 대응

▪ **[위기인지]** 부처가 위기품목으로 지정

▪ 부처 미지정시 기재부가 지정

▪ **[위기대책본부]** 1차적으로 부처가 운영

▪ 범정부 사안 확대시 기재부 총괄

▪ **[위기조치]** 수급안정조치, 긴급조달 추진

▪ 예비비, 긴급수급물자 고시 등 지원

▪ **[손실지원]** 부처가 손실 지원

▪ 손실지원 근거 및 체계 마련

컨트롤 타워

공급망안정화위원회 (위원장:기재부장관)

▪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조정

▪ 기본계획, 위기품목의 지정, 공급망안정화기금 정책 등 식의

범정부 대응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

공급망기본법

공급망안정화기금

Ⅱ. 후속조치 추진계획

1. 공급망위원회(컨트론타워) 구성

-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공급망위원회 설치·구성
 -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(‘24.6월)
-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‘24.하)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(‘25.1월) 수립*
 - * (수립절차) 부문별 계획 작성·제출(소관 부처) →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 기본 계획 수립(3년단위, 기재부) → 공급망위원회 확정 → 시행계획 수립(소관 부처)
-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조직인 공급망기획단(∼’24.3.13)의 정규조직화 추진(‘24.3월)
 - * (’22년 국감 요구사항) 최근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과 같은 소규모 부서가 아니라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마련할 것

2. 경제안보품목 지정

- 국가·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, 원재료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 지정(‘24.하)
 - 경제안보 TF를 통해 선정되어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 등을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관리
-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·생산·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·지원(‘24.하)
 -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, 생산기반 신설, 기술 개발,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 지원

3. 조기경보시스템 구축

-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(EWS)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제고 추진
 - 외교부(해외동향)·관세청(통관정보)·조달청(비축현황) 관계부처 및 코트라(해외동향)·광해공단(비축현황) 등 유관기관 협업 확대

4. 위기대응 매뉴얼 도입

-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*("24.1월)을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·운용
 - * 공급망 위기상황 단계 및 판단기준, 위기단계별 수급안정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,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
-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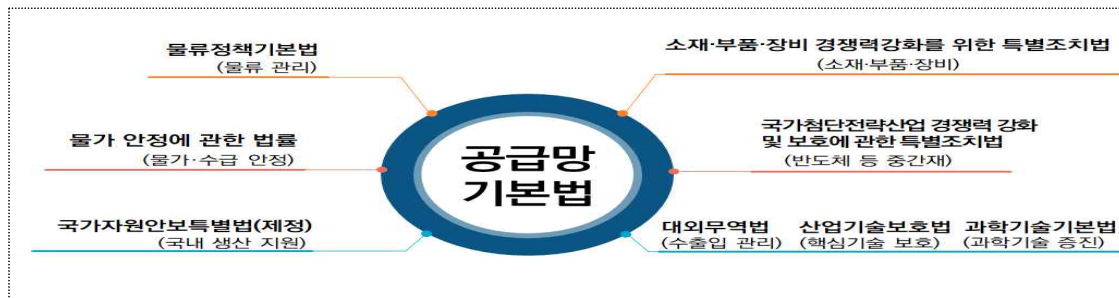
5.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

-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* 설치
 - *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,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
 -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업들에 경제안보품목 확보, 국내외 시설투자 등 지원(대출, 보증, 출자 등)
- 향후 국회 보증동의("24.1분기), 수은에 전담조직 신설, 기금심의회 구성("24.6월) 등을 통해 '24년 하반기 기금 운용 개시

Ⅲ. 기대효과

①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

- 첨단산업·기술개발, 품목 관리 중심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넘어, 서비스·물류 등 폭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 가능



② 컨트롤 타워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

- 개별 부처의 책임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공급망위원회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정책의 수립과 조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

③ 공급망 위험 징후 조기파악 및 선제적 대응 가능

-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(EWS) 운영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수급·가격 여건 등을 밀착 관리 가능

④ 공급망 위험 예방·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가능

- 수입선 다변화, 기술개발,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,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력 강화

⑤ 공급망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가동

- 위기품목 지정, 위기대책 본부 신설, 긴급조달 등 특례도입, 손실 지원 등 가능

참고2**후속조치 추진일정**

추진과제	일정	소관
1. 기본법령 입법		
● 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	'24.6월	기재부
2. 범정부 공급망 관리 체계 마련		
●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	'24.6월	기재부
● 경제안보품목 등 지정 및 선도사업자 선정	'24.하반기	부처
●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	'24.하반기	부처
● 위기관리매뉴얼 표준안 마련	'24.1월	기재부
3.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		
● 공급망기금채 국가보증동의 절차(국회)	'24.1분기	기재부 수은
● 수은內 전담조직 신설 및 업무 시스템 구축	'24.상반기	수은
● 기금 운영 개시	'24.3분기	수은

주) 공급망기본법 및 수은법 개정안 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6개월('24.6월)